

광주·전남 가계부채 타 지역 대비 낮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증가율 다소 빨라

가계부채 잔액 광주 24.9조 · 전남 22.5조원

“취약 요인 선제적 대응 정책 방안 마련을”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는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 조사팀 정서립 과장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와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인 반면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지

역 대비 증가율이 다소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 잔액은 47.3조 원으로, 가계부채 전체(1036.0조 원)의 약 4.6%를 차지했다.

광주 지역의 가계부채 규모는 24.9조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울산(20.6조 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22.5조 원으로, 9개 도 중 제주·강원·충북 다음 순이다.

광주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5%로 전국 평균(56.3%) 대비 높은 편이었지만,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인천 다음으로 낮았다.

전남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9.7%로, 9개 도 중 충남 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잔여리스크 점검 결과 중·저신용차주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신용등급별 부도 확률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손실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택시장의 경우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수급 여건이 양호한 편이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타 지역 대비 상

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전남본부는 향후 금리 정상화 시기가 다가올 때를 대비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취약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립을 통해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차주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자산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등과 관련된 상담 기능을 활성화해 취약 차주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만기 다변화 등 대출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는 분석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로 배송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달도 안내도 안한다”

택배·마트노조, ‘NO일본’ 동참… “불매운동 참여 당연”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로 배송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포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유니클로 브랜드가 불어 있는 박스에 ‘택배노동자들은 유니클로를 배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택배노동자들의 선언에 앞서 대형 마트 3사 노동자들도 이날 매장 내 일본제품 안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지부 마트노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

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롯데마트 원주점 직원 김모씨는 “일본 경제보복 이후 한 주에 400여개 팔리던 일본산 아시히 맥주가 50개 정도로 판매량이 줄었고, 일본산 맥주들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런 (안내 중단) 선언에 동참해 일본제품들의 판매중지 등 대국민 정서에 맞는 행동들을 선제적으로 단행,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님을 똑똑히 알려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롯데마트 원주점 직원 김모씨는 “일본 경제보복 이후 한 주에 400여개 팔리던 일본산 아시히 맥주가 50개 정도로 판매량이 줄었고, 일본산 맥주들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런 (안내 중단) 선언에 동참해 일본제품들의 판매중지 등 대국민 정서에 맞는 행동들을 선제적으로 단행,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님을 똑똑히 알려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와 여행 중단 선언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라는 국민을 만나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친근한 노동자”라며 “아베 정권 조치에 맞서 대형 마트 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 조직 노동자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였단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100여년 전 침략을 또다시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수백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의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마트노조는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